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전체 공정률이 37%에 이르면서 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어린이문화원, 예술극장 등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2년내 2천억 예산 확보가 관건

## ■ 아시아문화전당 어디까지 왔나

### 공정률 고작 37% ... 콘텐츠 확보도 문제

현재 공정률 37%를 보이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이 예산과 콘텐츠 확보 문제로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는 2014년 개관을 위해서는 2300억원 이상의 국비 예산이 필요하고, 다양한 콘텐츠 확보가 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년 사이 2000억 원이 넘는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남은 기간 콘텐츠 개발 등이 활발하게 이뤄질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전당 공정률=이날 현재까지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공사 전체 공정률은 37%를 보이고 있다. 이 중 터파기 등 토목 및 건축 공정률은 48%, 그리고 기계·전기 20%, 정보통신 10%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예초 올해 1000억원의 예산 확보가 목표였지만, 676억원 밖에 확보되지 못하면서 공정이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골조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지난 달 23일부터 매일 2차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현장 탐방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2014년 개관 가능하기=오는 2014년 개관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2014년 개관까지 필요한 국비 예산은 총 2300억원이

다. 2013년과 2014년 2년간 2300억원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개관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매년 확보된 예산에 맞춰 공정률이 산출되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2014년 개관 가능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공부와 광주시는 내년 초 최소한 1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공정률을 84%로 끌어올리고, 개관 예정 해인 2014년에는 1015억원을 확보해 공사를 마무리 짓고 개관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추진단은 내년 국비 예산으로 16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처럼 1000억 원의 예산 요구액 중 67%인 676억원 밖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2014년 개관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발주처인 문화관광부와 광주시는 오는 2014년 아시아문화전당 완공을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 사업 관련 예산을 모두 전당 공사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기로 하는 등 전당 개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종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현재로서는 전당 완공일정을 예초 계획된 2014년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큰 차질은 빚

어지지 않겠지만, 우선 내년에 최소 1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7개 권역별 추진 사업 예산 중 일부를 시급한 전당 공사 사업비로 전환시켜 오는 2014년까지 전당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콘텐츠 준비=문화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콘텐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추진단은 아시아와 함께하는 세계적 문화 트렌드 창출과 인문학·예술·첨단기술이 결합한 문화콘텐츠 창작기반 구축이라는 기본방향으로 콘텐츠 준비 중이다. 추진단은 예술극장을 전 세계 공연 기획인 국제공모를 통해 창작·제작 중심의 공연장을 만들고, 다양한 국내·외 공동제작 프로젝트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앞서 추진단은 전당에 걸맞은 최고의 예술감독을 선임하기 위해 지난 3월 국제심사위원단의 심사를 통해 벨기에의 프리 라이젠(Ms. Frie Leysen)을 최종 선정했다.

또한, 문화창조원은 다양한 장르별 창작환경을 조성해 새로운 문화콘텐츠 시제품 제작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시아문화정보원은 스토리와 조형·상징, 의례·공예, 의식주, 이주·정착 등 5대 영역의 아시아문화자원을 수집한 콘텐츠로 선을 보일 계획이다. 이밖에 어린이

문화원은 어린이 창작 프로그램과 축제 프로그램을 국제공모 및 개발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민주평화교류원은 민주·인권·평화정신을 아시아와 공유하기 위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 대선 출마하는 박준영 지사직 사퇴 언제?

# 지역 정치권 미묘한 관심

### 주승용·이낙연 의원 등 도지사직 도전

### 출사퇴로 국회의원까지 재보선 불가피

박준영 전남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사직 사퇴 여부와 시기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지사직을 사퇴할 경우, 지사직에 도전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사퇴가 이어지면서 무더기 재보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박 지사가 이달 중에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지사직 사퇴 여부와 시기를 함께 밝힐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지사가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사퇴 의사를 밝힌다면 전남지사 보궐선거는 대형 선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 지사 측에서는 우

선 6월에 출마 선언을 하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치러지는 9월 초순을 전후해 사퇴 의사를 밝히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박 지사가 6월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여수 엑스포가 폐막하는 8월 초순에 사퇴 여부를 밝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박 지사 측 관계자는 "일단 대선 출마 선언과 사퇴 여부 및 시기는 분리해 검토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함께 입장을 밝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며 "여수 엑스포 등 현안 때문에 사퇴 여부 및 시기에 대한 입장 발표는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선 출마에 따른 박 지사의 사퇴가 현실화된다면 대규모 보궐선

거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남지사에게 뜻을 두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주승용, 이낙연 의원 등을 후보로 거론하고 있으며 추가로 일부 현역 국회의원의 도전이 이뤄질 수 있다.

박 지사가 대선 출마에 따라 사퇴할 경우 도지사직에 도전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신분을 유지한 채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지사의 사퇴가 현실화된다면 내년 4월경 전남지사 및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가 이뤄지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아직 박 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지런 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하며 모든 것은 지역민과의 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국에서 만나는 명품LTE  
4G LTE ORIGINAL

# 7만의 명품 LTE 프리미엄 서비스!

4월 전국망 LTE 커버리지 확대 (전국 95% 커버)

LTE 요금제 기본 Data 용량 확대 (3GB→5GB)

T Freemium 콘텐츠 월 2만원 상당 무료 (영화, 게임, e-book, app 등)

## "LTE를 LTE답게" 하는 SKT의 프리미엄 서비스!

구분	SKT	LG U+	KT
데이터 제공량 (LTE 62 기준)	5GB (T cloud 50GB)	6GB (U+ Box 15GB)	4.5GB (U cloud 50GB)
데이터 상한 과금	최대 1만 8천원	전액 과금	최대 15만원
LTE 무료 콘텐츠	T Freemium (월 2만원 상당의 고품격 콘텐츠 무료)	없음	없음
T map	무료	월 4천원	월 4천원
중고 할인	T 에코폰 (갤럭시S 13만원)	없음	그린폰 (갤럭시K 5만원)
기기 할인	LTE 스페셜 보상 행사 (10만원 할인)	없음	LTE 기변 대축제 (10만원 할인)

(12년 4월부터 적용)

## 대법관에 담양출신 고영한 등 4명 임명 제청



고영한 후보

양승태 대법원장은 다음달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후임으로 담양 출신인 고영한(57·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

장관과 김창석(56·13기) 법원도서관장, 김신(55·12기) 울산지법원장, 김병화(57·15기) 인천지검장 등 4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했으며, 국회는 청문회를 거친 뒤 동의 투표를 하게 된다. 안건이 가결되면 이 대통령은 이들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고영한 후보는 1984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명된 뒤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고 후보는 민·형사사건은 물론 형·파산 사건에서도 치밀한 법리를 펼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원만한 성격과 절제된 행동, 높은 인품으로 법관들과 직원 등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지난 1991년 서울고법에서 근무할

울 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수석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부산 출신인 김신 후보는 소아마비 장애를 이겨내고 1983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명된 이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 울산지법 등 부산지역 각급 법원에서 근무한 향관이다.

/윤현석기자 chadol@연합뉴스

## 빛의 만평

- 김중두



불난 집에 부채질?!